



10·29이태원참사 특별조사위원회

# 보도자료

2025. 7. 8.(화), 14시 이후 보도

피해자 권리보장  
철저한 진상규명  
재발방지 대책수립

담당자

대외협력과장 고영호(02-2650-1081), 담당자 이훈(02-2650-1085)

## 10·29이태원참사 특조위, 재난·응급의료 대응체계 전문가 세미나 개최

- 재난 발생 시 응급의료 대응체계의 문제점 진단과 개선 방안 모색

- 10·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(위원장 송기춘, 이하 '위원회')는 8일 오후 2시 위원회 8층 대강당에서 「이태원참사와 재난응급의료 대응체계」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.
- 위원회 위원과 조사관을 대상으로 개최된 이번 세미나는 직권사건 8개 조사과제 중 “재난 대응 과정의 적정성 및 개선 방안 조사” 과제의 일환으로 이태원참사 당시 응급의료 대응체계 전반의 문제를 분석하고,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하는 긴급상황에서 재난응급의료 대응체계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.
- 이날 주제 발표에 나선 서울대학교병원 응급의학과 김주현 교수(現 인천적십자병원 응급실 근무)는 △군중밀집으로 인한 압사 사고 △경험하지 못한 현장에서의 구조 대처 미흡 △재난안전통신망의 미활용 등을 참사 당시 현장 초동 대응 과정의 문제점으로 말했다.
- 특히 김주현 교수는 현장 구조와 응급의료 대응 과정에서 드러난 혼선과 초기 컨트롤타워 부재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시했다.

- △현장 통제 및 긴급 구조체계 강화 △환자집결지 및 임시의료소 신속 설치 △현장응급의료소 운영체계 표준화 △중증도 분류·처치·이송까지의 일원화된 대응 시스템 구축 △실시간 현장 상황 정보 공유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함을 강조했다.
  
- 아울러 중증도 분류 없이 CPR이 시행된 결과로 인해 전문적인 처치와 이송까지 이르는 시간이 지체되고, 환자 수용 가능 병상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인해 특정 병원에 사망자가 집중된 문제도 함께 지적했다.
  
- 송기춘 위원장은 “이태원참사 당시 현장의 혼란과 구조 지연, 응급의료 대응체계의 부재는 사고를 참사로 키운 원인 중 하나로 볼 수 있다”라며 “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부실한 응급의료체계를 체질적으로 개편하는 근본적인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”라고 말했다. //끝//